정부 "대구센터 이전 20개 시스템, 논의" 복구 시점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살피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민재 행안부 차관,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
709개 시스템 중 325개 복구… "384개는 복구 중"
1·2등급 등 288개 이달 말, 76개 내달 20일 목표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를 입은 정보 시스템 중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할 20개 시스템을 오는 17일 소방청 등 소관 부처 5곳과 협의해 이전 복구 계획 등을 논의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장애 시스템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로의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장애를 입은 정보 시스템은 총 709개로, 이 중 이날 낮 12시 기준 32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45.8%)됐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 2등급 시스템은 68개 중 39개(57.4%)가 복구돼 정상 운영 중이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복구돼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도 가능하게 됐다.

384개 시스템은 복구 중이다.

김 차관은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시로 재배치해 복구할 시스템은 추가 장비 도입, 스토리지 분진 제거 등을 통해 데이터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복구된 시스템 중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 등 288개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복구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미복구 20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소방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조달청, 기후환경에너지 등 소관 부처 5개와 복구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수시 협의를 통해 시스템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대구센터에서 이전 대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조속하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20개 시스템의 구체적인 복구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대구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내일 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진행 상황에 대한 체크가 있을 예정이지만, 각 사업자들과 실제 이전하는 이용 기관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은 내일인 17일까지,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같이 국민 생명·안전 등과 밀접하지만 등급이 낮은 시스템들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등급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세심히 점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 백업 및 이중화 등 제도적인 정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를 구성해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수석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석 디지털정보혁실실장은 "지금 AI 전략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 산하에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가 가동되고 있다"며 "AI 수석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팀이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킥오프 회의는 지난 4일 처음 이뤄졌다"며 "복구 계획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유엔, 이미 5개월 전 캄보디아 경고했다… "고문, 인신매매 우려"

"수십만 명 갇혀 범죄 동원… 탈출 시 죽음"
캄보디아 등과 연락… 韓 등 주변국과도 공유

유엔이 5개월 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고문, 인신매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19일자 성명에서 "동남아시아 전역 사기 단지에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 명이 갇혀, 온라인 사기나 범죄 활동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미,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유인했으며 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시설에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문, 학대, 구타, 전기 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린다"며 "음식과 깨끗한 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견뎌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른 조직에 팔리거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출을 시도하면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다.

특히 "조직적 범죄 집단은 정부 관료, 정치인, 사법 기관, 유력 기업인들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등 부패가 만연하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돈세탁, 온라인 뱅킹, 지하 경제가 이같은 착취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상황이 깊이 고착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복으로부터 보호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얀마 군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연락을 취했으며, 주변 국가와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도 전달했다고 성명은 명시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 가능해진다

李,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혁신 신약, '전 세계 가장 빠른' 240일 내 허가 목표 설정
폐배터리 수입 관세 3%로 경쟁력↓… 내년 1분기 내 완화

내년부터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가 논의됐다.

그 중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치료는 올해 2월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해졌으나,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어려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면 해외로 나가는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만성통증·근골격계 등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들은 국내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보건 당국의 허가·심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자원 수입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논의됐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도 재생에너지 지구로 선정될 경우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튬이나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폐자원 수입규제도 합리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배터리 등을 수입할 때 허가신고제나 수입관세(3%)로 인해 규제가 보다 유연한 미국·일본에 비해 수입 경쟁력이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수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 내에는 폐자원 수입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국내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를 대상으로 정책 펀드를 확대해 지원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은 가상·간접광고·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 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K-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지 않은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규제 원칙으로 지켜줘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조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민주 "10·15 부동산대책, 불가피한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격론에… "실수요자 피해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놓고 야권과 일부 실수요자의 비판이 이어지자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역을 설정해 규제한 것"이라며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개발이 가능한 유휴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9·10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개발을 시행해 공급을 늘리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오는 12월까지 추가적인 자세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내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여당·야당·정부·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 중이어서 아직 논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청년·서민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 "부동산 문재인 정부 2.0 선언"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뉴시스